

사 설

관심이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오는 4일 지방자치선거가 치루어지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 많은 기대와 사회전체의 활력을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대 속에서 화려하게 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정치권의 이벤트 정도로 전락한 느낌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복마전의 양상을 드러내는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IMF관리체제라는 전국민적인 위기의식과 함께 많은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다.

각 후보마다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등은 전무한 상황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다시 고개드는 지역감정은 기존 정치권 차원, 또는 정당당락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조장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참신한 얼굴들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물들도 복마전 속에서 간간히 내비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구태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국가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중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는 한가지 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국가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일련의 위기상황은 경제분야를 뛰어넘어 이제 실업자 문제 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위기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개혁조치의 성패는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경제위기로 표출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점은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라는 의구심으로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분출되는 불만에 대한 미봉책보다는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과 근본적인 변화만이 현시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된다. 기존에 보여온 재계의 금융권에 대한 개혁조치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제 개혁의 성패는 우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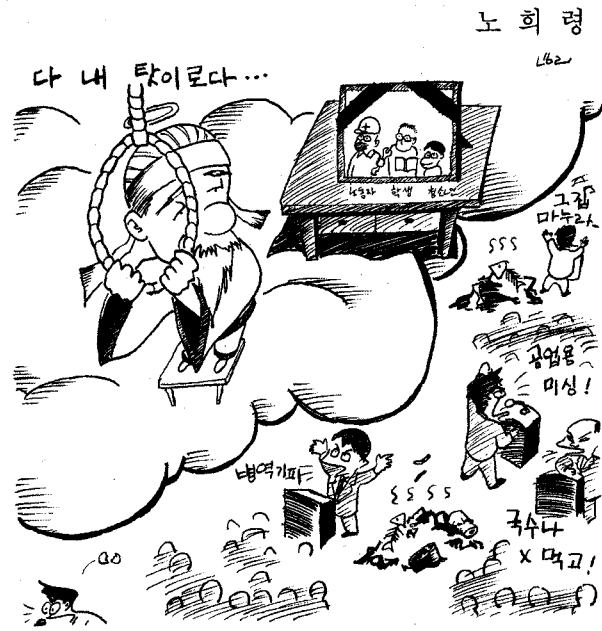
정치권의 개혁, 말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여 하부로부터의 변화를 구현해야 현재의 위기상황을 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과정을 기반으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변화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에게 만연되어 있는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은 국가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결과만을 양산할 뿐이며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권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자치선거에 임하는 국민 개개인의 자세가 절실한 시기이다.

구태의 고리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위기상황은 심각하다. 국민 각자가 행사하는 4번의 투표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어떤 후보,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개혁과 발전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선거관에서 행해지는 기존의 모습들을 뒤로 하고 선거가 발전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올바른 판단과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시기이며 반드시 개혁적인 성과물들을 거두어야만 한다. 무관심은 우리의 미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만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경 희 만 평



세 시 봉

민주노총 총파업 그 이후...

민주노총이 그간의 선전포고를 실천에 옮겼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에 총파업이 서울과 울산에서 각각 강행되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제 호소를 무시, '27일 노사정위원회 출범' 등 현안 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총파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사이의 대립 양상은 아직 뚜렷한 타결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의 가파른 '노동정국'을 풀 해결방안은 달리 없다. 단지 대화와 협상만이 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10만 명이라는 적은 수가 말해 주듯이 이번 파업은 절박한 노동현실과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처지를 직접 반영한 것이다. 그런 만큼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자세는 어떠한가.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도 '1차 파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2차 파업계획 철회', 그리고 '27일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의 회유책을 펴고 있다.

이에 비추었을 때 민주노총과 정부 양측은 서로를 배려해 가며 대화의 틀을 마련하는 '물고기'를 트기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양측이 물밑 접촉을 통해 민주노총의 '대정부 5대 요구안' 중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 철폐' 등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합의점에 도달했다고 한다.

결국 이번 총파업은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 정책·실업 정책 제논의 한계사이에서 비롯된 갈등표출로 해석된다. 이런 갈등은 현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커다란 틀에서 대화가 이뤄진다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고용·실업정책과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대량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노동계 또한 징정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원한다면 그동안의 경직되고 강성한 모습을 벗고 보다 능동적이고 열린 자세를 보여야한다. 그럴 때 비로소 파업으로 악화된 노정갈등의 해결의 실마리와 국민지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과감한 정부개혁과 재정효율화 우선 과제

각종 비파세·감면제도 우선적 폐지... 공기업의 민영화 과감히 추진해야

이 주 호
(KDI 국제대학원 부교수)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아래서 우리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및 자본금 확충,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는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을 줄이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대책에도 많은 정부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속도가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재정건실화에 힘써 온 결과 선진국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은 재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올해 98년 추경예산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3조8천억원, 실업대책 소요자금으로 5조8천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부담은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및 예금자보호 등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하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끝마치고, 이를 위해 발행한 각종

채권을 동 기간내에 모두 상환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5년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은 총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추정한다. 이는 부실 채권 정리기금의 매각손실률을 20%로 가정하였을 때의 결과이고, 만약 매각손실률이 50%인 경우에는 5년간 금융산업 구조조정 비용이 총 8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과감한 정부개혁에 착수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는 현재 경제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위직 보다는 중상위 관리직에 중점을 둔 보다 혁신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국장급 이상 고위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실적에 따라 재계약 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이어 각종 산하단체 및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에 착수한다.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전문성 강화, 민간교류 촉진을 위해 장관 재량하에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정령한 공무원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하에 부패척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재원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감면의 대폭적 축소와 철폐, 세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여야 한다. 국제적 과세기준과 원칙에 부합되지 않은 각종 비파세, 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 재정비하여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 및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여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재원조달 뿐 아니라 정부생산성의 제고 및 대외신인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주식매각 계획, 전문경영제의 도입 및 강화 방안 등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세수증대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재정소요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급속한 채권발행 물량의 증가는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고 회사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채권발행을 적극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넷째, 각종 공공·기타기금의 일반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관리비를 대폭 절감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 여유자금 2~3조원을 긴급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의 98년도 공공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약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



▲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조정기구의 합리적인 제도조정이 필요하다.

미국 여행도 즐기고, 코튼 농장도 견학하고...

미국코튼마크가 10명의 고객에게 미국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미국의 명품 브랜드인 Cotton USA의 100% 순면제품을 소개합니다.

여행일정

- 10.3일~5일: 아틀란타의 '비람과 함께 사라지다' 박물관, 코카콜라 박물관, CNN 센터, 미틴 루터 킹 목사 기념관, 스톤 마운틴 파크 등.
- 10.5일~7일: 미국남부 최대의 휴양지인 올랜도의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 10.1일~3일: 댈러스의 연화관 유적지 및 연화농장, 알라모 프레스코의 그레이스 랜드, 블루스 발상지 빌 스트리트 등.

행사내용

아래 설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행운을 드립니다.

설문 '미국코튼마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 번입니다.

1) 모든 면제품에 붙는 표시	2) 미국산 원인에 붙는 표시
3) 품질 좋은 면제품에 붙는 표시	4) 미국산 면제품에 붙는 표시

응답자 인적사항

① 성별: 남, 여	② 나이: 세	③ 직업: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광고를 본 신문이나 잡지명:		

*절취선을 잘라 관제사에 보내주시거나 또는 위의 내용을 관제사에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 응모기간: 6/1(월) ~ 6/30(화)
● 보내실 곳: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0 마일딩 303호 (우: 110-140) 미국면화협회 "미국 Cotton Trip" 담당자 앞
● 당첨자 발표: 7월 20일 (월) 스포츠서울
● 미국 여행 기간: 10/1(목) ~ 10/8(목)
● 행운의 선물: 1등(10명): "미국 Cotton Trip" 참가자격 2등(5명): 원터치 접이형 자전거 3등(10명): 가비앙 전자수첩 (PA-3000H) 4등(50명): 문화 상품권 (2만원권)
* 1등 당첨자 중 해외여행에 갈격 사유가 있는 분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행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주최: 미국면화협회 스포츠서울 ■ 후원: (주)미지항공여행사